

민주 “조희대 사과하고 사퇴해야…내란재판부 위헌 아냐”

“사법의 정치적 중립 스스로 어겨…탄핵 대상” 일제 공세

“법원 내부 신뢰 잃어”…내란재판부 당론 추진엔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며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낚아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석방한 지극히 판사가 잘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불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 평가가 있었다”며 “대법원장이 그러도 대단하나,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개인적·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조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시속 100km 주행 고속도로에서 20km를 고집하며 태업을 일삼으면 운전자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사법부가 살아나는 길”이라며 개인 의견을 전제로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탄핵의 대상

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대응 방향에 관한 진행자의 질문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수처 등에서 수사를 해서 사법 거래가 있었는지, 이 중요한 대선 후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부의 결정이 있었는지, 어떤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맡고는 입법사항”이라며 “입법 사항이 위헌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 판사의 참대 추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내란을 하찮게 여기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라며 “사법부도 오히려 싫으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죽이기 등 부끄러운 일에 사과하고 자정 노력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황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제헌의회에서도 사례가 있다”며 “해방 이후 친일 정산과 불법 계엄·내란으로 인한 국가 반란, 국민 반역의 청산은 그 무게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헌 논란을 피해 법원의 자정 노력을 우선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당론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그냥 하던 속도대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의 도중 서로 활짝 웃고 있다. 정 대표는 최고위 공개 발언을 끝내면서 김 원내대표에게 지난 주 여야 원내 협상을 두고 당내 갈등이 표면화 된 것을 사과 발언을 했고 김 대표도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어 악수했다. /연합뉴스

“더 단단하게 뭉치자”…정청래·김병기 갈등 봉합 ‘원팀’ 선언

당·정·대 회의 이후 다시 악수

더불어민주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5일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 및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고 ‘원팀 기조’를 재확인했다.

전날 저녁 총리공관에서 사흘 만에 손을 맞잡으며 ‘당정 원팀’을 외친 연장선이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1일 3대 특검법의 여야 합의안 파기를 공식화한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웃음기”를 쏙 빼 냉랭한 기류를 유지했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장에는 두 사람이 만면에 미소를 띠며 단단히 뭉쳤다.

김 원내대표가 정 대표의 팔을 장난스레 ‘톡’ 치자, 회의장에 미리 앉아 있던 최고위원들과 의원들은 웃음을 터뜨리거나 일부 박수를 치기도 했다.

평소 최고위원들은 회의 시작 전 눈인사와 함께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통상적인데, 이날은 서로의 손을 잡고 인사했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일제히 손을 맞잡고 일어나 사진 촬영도 했다.

이날 회의는 정 대표의 “경례” 구호와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다.

정 대표는 “어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부·대통령실이 만나 더 소통하고 더 화합하기로 했다”며 “더 잘먹같이 뭉치고 차들같이 단단하게,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인 제게 있기에 당무를 보다 철저히 지휘하고 감독하며, (문제가 있다면) 즉시 바로잡겠다”며 “중요한 당내 사안은 제가 직접 구체적으로 일일이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원내지도부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를 향해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심하고 힘든 며칠을 보내신 것 같다”며 “우리 김 원내대표께 위로를 드린다. 힘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연합뉴스

민형배 “정부광고 지역지 비중 41.8%로 하락”

호남, 영남의 3분의 1에 그쳐

정부광고에서 지역지 비중이 3년 연속 감소세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앙지 정부광고 윗림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 지역지는 같은 기간 누적 집행액이 영남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 비중은 2022년 46.0%(1046억 2800만 원)에서 2023년 42.7%, 2024년 41.8%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앙지는 54.0%에서 58.2%로 올라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중앙지 56.5%, 지역지 43.5%로 격차가

선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영남 소재 지역지의 누적 집행액이 1411억 6700만원, 호남은 461억 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호남의 몫은 영남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충청권과 비교해도 200억 원가량 적다. 연도별 비중으로 보면 호남은 2022년 11.8%, 2023년 12.9%, 2024년 12.8%로 정체 흐름이 이어졌다.

민형배 의원은 “지역신문 활성화는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과제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균형발전’과 ‘언론 다양성 보장’ 공약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역·매체 간 집행 기준을 정례적으로 공개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 설계를 병행하는 ‘균형 집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대로 50억 유지

구윤철 “당 입장 등 종합 고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관련,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 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당초 10억원이었던 대주

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지만, 기대했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부자감세 논란만 컸다는 지적을 고려해 원상복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힘을 실으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한 시장 의견을 종합 정리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온 결과”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